

건설근로자 교육 담당할 기관 확정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 지난 18일 최종 선정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의 16개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을 담당할 기관에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를 포함해 총 16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강원지역-(사)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주)안전하는사람들 ▲부산울산경남지역-(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 한국건설안전기술(주), (주)한국안전기술원 ▲대구경북지역-(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인천경기지역-(사)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 제일건설안전기술(주), 한국건설재해예방(주) ▲광주전남·북지역-(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재)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대전충남·북지역-(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회, (주)세종건설안전기술단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교육신청은 건설근로자 개인이나 건설현장, 전문건설업체, 직업소개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을 원할 경우 해당 관할 지역별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훈 건설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이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취업능력 향상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실시 기관과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7월 '석면안전 강조의 달' 운영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8월 7일부터 시행될 석면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그밖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cm³)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지자체 건축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정현욱 산업안전보건국장장은 "7월 운영될 '석면안전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하역근로자들도 조만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하역부문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6월 10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하역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가 불명확하고, 노무제공 분야(항만, 철도, 시장, 창고 등)가 너무나 상이해 보험가입 주제 지정이 용이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하역근로자들 중 사회안전망 없이 산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고, 산재보험료는 징수 누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왔다.

이에 하역부문위원회는 2007년 12월부터 하역근로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08년 5월에는 '하역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우선 논의·합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문은 농수산물시장 등 하역근로자 노무공급체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장 중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하역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항만·철도 등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해당 부문의 여건, 관련 기관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역 부문별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의 업종별 적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 최초로 실시”

노동부가 반도체업체에 대한 산업보건 위험성평가를 올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도체업체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는 지난해에 실시된 '반도체업체 역학조사'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역학조사의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를 확인하였으나, 추적기간이 짧고 정확한 직무 및 공정분류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 심층연구(2019년까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심층연구 외에도 개선이 시급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노동부는 반도체업체의 화학물질취급공정, 방사선취급공정 등의 주요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보건 임시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 가운데 림프조혈기계 질환 발생자가 많았던 3개 업체(삼성전자, 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의 6개 공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산업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하며, 향후 노동부에서 그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자문단은 산업독성, 노출평가, 환기설비, 교육, 보건관리 등 5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반도체공정에 있지 모르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보건관리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자문을 하게 된다. 자문단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산

업보건 분야(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독성·산업환경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앞으로도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자율적으로 보건관리 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사업장 보건관리 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업보건분야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위험성평가 활동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에서는 충실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17조원 손실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7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GDP의 1.67%,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손실액(3조원)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손실은 커진다고 이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율(0.7%, 재해자수/근로자수×100)이 아직까지 높은 원인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영세 사업장의 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협착·전도·추락 등 이른바 후진적 재해로 일컬어지는 재해유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산업안전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 각계의 유기적인 협조로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수준(재해율 0.19%)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산업안전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체계적인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중장기 정책이 구축되어야 하고, 재해 다발 업종 및 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업관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